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노동자 양보와 희생 위한 요식절차일 뿐이다

관련 기사 3, 5~7면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혼란

3, 5~7면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19가 보여 준
자본주의의 냉혹함

10~11면

한국판 뉴딜
노동·환경 외면한
친기업 정책

2면

최저임금, 해고,
고된 일 등

9, 12면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12면

8월 한미연합훈련
워게임

4면

한국판 뉴딜

노동·환경 외면한 친기업 정책

정선영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 지방비 25조 원, 민간 20조 7000억 원을 포함해 총 16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100년의 설계”, “국가 대전환 선언”이라는 거창한 의미 부여와 대조적으로 실제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경제 침체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친기업·반노동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과 5G 등 혁신 기술을 성장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기술 육성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말은 박근혜 정부도 하던 얘기(창조경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떠들썩했지만 지금은 이미 한풀 꺾인 상태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신기술을 육성하고 투자와 성장을 이끌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었다.

정부는 신기술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2018년 9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를 밀어붙인 바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는 사고 위험만 키웠을 뿐 투자를 촉진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7.6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이번에 정부는 “데이터 댐”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를 물처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근거는 미약하다. 물론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를 더 민감하게 파악하거나 개인 맞춤형 광고 등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광고가 생산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경제 침체는 단순히 소비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은 기업들의 이윤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있다. 지난해 한국의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예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꺼려왔다.

물론 국제적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

고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정부의 투자 지원을 반기고 있다. 빅데이터, 5G, AI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은 다른 여러 나라들도 발표하고 있다. 이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그 기업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은 이번 발표에서 “선도” 국가가 돼야 한다는 말을 11번이나 썼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 경쟁에서의 성공은 보장돼 있지 않다. 게다가 이러한 경쟁은 새로운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혁신 기술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이 아닌 기계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이런 경쟁적 축적 압력은 이윤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이나 건강 등을 후퇴시킬 내용들을 통해 이윤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에 개악 요소들이 많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디지털 돌봄” 등과 같은 원격의료 정책이 대표적일 것이다. 이는 영상·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이윤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현재 대면업무 중심인 공공서비스의 디지털전환율을 2025년까지 80퍼센트 이상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엄청난 불편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는 5G·AI 기반 지능형 정부를 추진하겠다고 이를 통해 “복지급여 중복지금지 방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복지 수급자들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린뉴딜 — 녹색 분칠에 불과

지난 5월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키겠다고 한 뒤 정부의 그린뉴딜에는 “그린”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에서도 달라진 게 없다.

이번 발표에서도 정부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목표·계획이나 기업 규제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노후 건물 리모델링, 친환경 기업과 산업 육성 등 친시장적 대책 일색이었다. 대표적인 회색 기업인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정의선이 자사 제품 광고를

하듯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결국 재벌 뉴딜이었나?”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생산과 운영을 민간에 내맡길 뿐 아니라 전력 판매도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민영화는 평범한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친시장적인 방식으로 기후 후 위기의 원인 물질인 탄소 배출을 줄

일 수 없다. 시장 논리로는 거대한 화석연료 기업들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권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 친시장적 녹색 성장 정책은 결국 녹색 분칠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한국전력은 두산중공업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이 체코의 핵발전소 수주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턱없이 부족한 고용·사회 안전망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자 구조조정을 전제로, 그 피해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유연안정성”이라는 말로 이런 방향을 가리켜 왔다.

그러나 기업주들의 이윤 때문이 아니라면 기술 혁신이 노동자 해고로 이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고용 안전망 강화 대책도 대량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전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고용보험

법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절끔 확대에 불과해 전체 특고 노동자 220만 명 중 3분의 2가량이 배제됐다. 특고 노동자의 가입 문턱을 크게 제약하는 전속성(노동자가 한 기업에 속해야 한다는 것) 등의 기준도 그대로 유지됐다.

만들어질지 장담하기 힘든 일자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은 최대 6개월간 월 180만 원을 받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2021년에 5만 명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실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노동자와 환경은 외면한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임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당일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체협약 3년 연장, 작업장 점거 금지 등을 담은 노동법 개악안을 발의했고,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해고를 강요해 왔다. 탄력근로제 확대뿐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개악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 참가해 들러리를 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에 매달려 온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는 노동자들을 공격할 생각만 해 왔음을 보여 준다. 경제 불황이 더욱 심화하고, 정부와 기업들의 노동자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체를 폭로하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이 글은 7월 11일에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7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성원 다수와 가맹 산하 조직의 각급 단위들이 지난 며칠 동안 노사정 합의 반대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반대 입장을 줄줄이 발표했는데도 말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반대파를 반박하면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며 강행을 정당화했다. “대의원대회에서의 결정[은] 조직운영상이나 규약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형식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잠정 합의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밟으려 하지 않았는가? 처음에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중집에서 잠정 합의안을 추진받으려 했다. 이것을 중집 위원들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김 위원장 측은 “민주노총의 대의체계 원리”를 들먹이며 “대의원님들의 판단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 측의 관심은 “민주노총의 대의체계 원리”를 존중하는 데 있지 않고 오로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승인받는 것이다. 민주노총 대의원과 활동가들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정당화하는 김 위원장 측의 형식 논리를 거부해야 한다. 절차 규정과 형식적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무슨 목적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느냐이다.

승인을 위한 합의안 윤색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 승인 여부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책임 있어야 할 사람은 대의원들이 아니라 김명환 위원장 자신이다.

김명환 위원장 자신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의했고, 위기에 내몰린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3대 요구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여 대화 끝에 나온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혀 실질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 측의 협조와 양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항복 문서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김명환 위원장 측이 강수를 단진만큼 좌파들도 단호하게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에 반대해야 한다. 7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연 김명환 위원장

이런 결과를 인정하고 잠정 합의안을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 있는 처신일 것이다.

그러지는 않고 김명환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을 장밋빛으로 색칠해 해설하며 성과를 내세우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조합원 담화문에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노동조합이 없는 압도적 다수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 적용, 상병수당 도입 등을 보장할 최중안.”

그러나 노사정 합의를 압박하는 언론들조차 대개 노동계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원론적 언급에 그쳤음을 인정한다. 총고용 보장과 해고 금지 약속은 없었고, 고용보험 확대 문제는 모호하게 열어 뒀고, 상병수당은 용어 사용도 피한 채 논의 추진만 언급했다.

김명환 위원장의 장밋빛 해설은 잠정 합의안이 작성된 지 며칠 만에 현실의 반박에 부딪히고 있다. 7월 8일 정부가 민주노총이 규탄해 마지않던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민주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당시 민주노총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월 6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탄력근로 확대 법안은 또 다른 사례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 탄

력근로 확대 등 자본의 개악 요구를 분명하게 저지하면서 최중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작성된 지 며칠 만에 민주당이 탄력근로 확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이 합의안에서 무엇을 뺐다고 자랑하든 그것을 개악 저지로 여긴다면 큰 착각임을 일깨워 준 사례이다.

김명환 위원장 측은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들은 … 노사정 합의 최중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치 노사정 잠정 합의안 반대파들이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김명환 위원장 측의 장밋빛 해설과 전망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것이기보다 오로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일념을 앞세운 부정직한 윤색일 뿐이다.

교섭 대표로서의 위신 걱정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을 먼저 제안한 조직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책임감 있는 결정”이란 노사정 잠정 합의안 승인을 뜻한다. **그에게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승인돼야 하는 이유는 결국 교섭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만약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을 마련은 앞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고, 이후 협상력은 물론 사회적 책임·정치적 위상 하락, 가맹 산하 조직별 노정 협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김명환 위원장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놓고 노사정 합의를 거부한다면 사용자와 정부 측이 우리와 계속 대화하려 하겠는가? 교섭 대표인 내가 합의안 승인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와 정부 측이 나를 믿고 교섭을 하겠는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김명환 위원장은 호기롭게 사회적 교섭을 제안했다가 자기 조직도 통제하지 못해 합의를 좌초케 한 민지 못할 교섭 상대로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교섭 대표로서 위신이 추락하는 이런 상황이 악몽과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김명환 위원장 측이 그토록 집요하게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집 위원들에게 “가맹 산하 조직별 노정 협의”의 운명도 연동돼 있음을 넌지시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안 사업장 문제도 더 큰 교섭력으로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고 현장 간부와 조합원들을 달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용자와 정부 측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위기에 내던져진 노동자들을 지키고자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다시금 강조하건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용과 조건을 지켜 줄 약

속은 합의안에 없다. 반면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이 사용자·정부 측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돼 있다. 노동조건 악화를 용인하겠다는 청신호인데도 말이다.

이런 노사정 합의를 하는 것은 지지자들과 노동계급을 배신하는 것이다. **교섭을 이어갈 교두보 마련하기를 노동자들의 조건 지키기보다 앞세우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이것은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위상을 높여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조합원들과 노동계급의 위상과 자긍심, 처지와 조건을 높이는 길은 되지 못한다. 이런 합의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소집되는 임시대의원대회는 정당성이 없다. 어떤 형식 논리를 갖다붙이더라도 말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 ★ 중보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 ★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현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 ★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휴대전화번호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이메일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김영익

지난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남북관계 위기는 일단 한숨 돌린 듯하지만, 남·북·미 간에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스티븐 비건이 방한했다. 그는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대표이기도 하다.

비건은 기자들에게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발언은 한미워킹그룹 한국 측 대표를 만나서 한 얘기였다. 그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 한미워킹그룹은 지금 남북관계를 위기로 몬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돼 왔다. 따라서 비건의 이런 발언은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내놓은 텅 서비스일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이를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진행하려 한다.

예컨대 한미워킹그룹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게중심은 한미워킹그룹 해체가 아니라 개선에 있다. 7월 2일에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한·미가 워킹그룹 운영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인영도 얼마 전에 워킹그룹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코로나19 우려에도 훈련 강행?

진보당,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등 좌파들은 옳게도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남한 당국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 북한은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는데 말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더 심각해졌고, 최근 미국 본토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군인들이 잇달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면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 관해 한·미군 당국들 사이에서는 규모와 시기 조정(8월에서 10월로) 얘기는 나와도 훈련 취소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7월 1일 한 강연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훈련을 의미하는 전구급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스티븐 비건이 방한한 7월 7일에 국방장관 정경두와 주한미군사령관 에이브럼스가 회동을 갖고 8월 한미연합훈련에 관해 논의했다. 미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올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에 차질이 빚어진 탓에 올 하반기 연합훈련은 어떻게든 진행돼야 한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 실시는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들에서 미국과 남한 정부들이 북한에 한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물론 연합훈련 비용과 주한미군 유지비를 한국이 적게 낸다는 핑소의 불만이 반영된 얘기였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9월 19일에 체결한 남북 군사합의에서 이렇게 약

속한 바 있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약속은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름만 살짝 바꾸거나 훈련 프로그램을 쪼개어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연합훈련은 계속 진행됐다. 지난 1월 국방장관 정경두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대대급 기준으로는 100여 회 이상에 달하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실시해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은] 증가했다.” 지난해 8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 훈련이 포함됐다. 이는 북한 점령 훈련이다. 올 4월에도 한·미 양국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의식하면서도,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서는 8월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논리는 전구급 연합훈련, 즉 대대급 이상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주한미군사령관의 강조점과 맞닿을 수 있다. 예컨대, 올해 국방부 업무보고를 보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면서 올해 “[한미연합군의] 전구작전을 주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이번 훈련에도 실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들, 즉 대북 선제 타격,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 북한 점령 훈련이 포함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연합훈련은 북한의 반발을 사면서 한반도 긴장을 높일 것이다. 게다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올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당국으로선 대응하기에 더 부담스럽고 더 위협적으로 여겨질 것이다. 지난해 8월에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해 동해에서 발사체를 잇달아 쏜 적이 있다.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도 자극할 만한 일이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이 지적하듯이, “한미군사연습이 대중국 견제의 유용성이 있는 한 미국은 훈련을 강행할 군사적 동기가 상당히 있다.”

6월 24일 미국 국방부 차관보 대행 데이비드 헬비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한·미 군사] 협력이 한반도 방위와 억지뿐 아니라, 그 성격이 훨씬 더 세계적인 것으로 진화할 것이라 본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계속될 수 있다. 계속돼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 사는 대중에 백해무익이다. 8월 한미연합훈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스티브 비건, 문재인 정부에 대중국 견제 협력 요구하다

스티브 비건이 방한 과정에서 주력한 의제는 한미동맹 관련 사안들이었다.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조세영은 비건을 만난 후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홍콩 문제에 관해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아 달라는 미국의 주문, 한국의 G7 참여와 G7 확대 문제, 경제번영네트워크, 화웨이 문제 등이 주된 의제였다고 알려졌다.

중국을 제압하는 데서 미국은 한국의 협력을 더 거세게 촉구하고 있다. 비건 방한은 단지 한반도 문제 논의만이 아니라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도 봐야 한다.

“글로벌 파트너십”

조세영이 언급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박근혜 정부 이래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을 규정한 용어다. 이것은 동맹의 범위를 적어도 아시아·태평양 일대로 확장한다는 개념이고, 미국이 자국의 패권 정책에 한국이 더 많이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양국 정부는 2019년 이래 합의한 대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계속해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갈등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을 드는 것은 주저하나, 미국의 협력 요구에 타협할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만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깜짝 북·미 정상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한다.

그런 가운데 7월 7일 트럼프가 한 인터뷰에서 ‘도움된다면 3차 북·미 정상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도 북한과 (정상회담보다 급이 낮은) 고위급 회담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7월 9일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은 “교착상태의 한반도에서 희미하지만 대화 복원의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며 트럼프의 발언을 환영했고, 문재인 정부에 현 정국을 돌파할 “적극적 평화외교”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만나기에 북·미 간에 풀어야 할 것들이 꽤 있다. 양측의 불신과 견해차가 근본에서 좁혀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한편으로,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을 다시 “불량국가”라고 비난하는 형편이다. 김정은으로선 ‘하노이 노딜’, 지난해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대화 결렬 등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7월 10일에 나온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의 담화에서는 북한 당국의 고심도 확인된다.

김여정은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일

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하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는 북한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고 했다. 그러나 그 ‘모험’은 성공하지 못했. 김여정은 이제 미국의 “안전한 시간 벌기”와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를 위한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북·미 회담 재개의 여지를 열어 놔다.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가 있다면 말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립절 기념 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고 싶다고 했다. 조건부로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을 밝힌 것이다.

북한 당국은 미국의 위협에 저항하며 핵·미사일을 개발했으나, 동시에 미국과의 타협을 모색해 왔다. 자본주의 국제 질서 안에서 온전히 숨쉴 공간을 확보해 안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 당국은 지난 30년 동안 거듭 실패했음에도, 김정은-트럼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준 북·미 대화 기회를 영영 잃고 싶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확산과 국내 정치 위기 속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7월 13일 미국 국무장관 폼

페이오는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해양제국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을 공언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일본에 F-35 전투기 105대를 수출하는 계획도 승인했다. 14일 일본 아베 정부는 방위백서를 채택하며 북한이 핵·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했다. 북한 ‘위협’을 내세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듯하다. 북·미 관계는 이런 문제들과 연동돼 장기적으로 계속 불안정할 것이다. 10월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까닭이다.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민주노총이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놓고 견해가 갈리면서 혼란과 위기에 처했다. 혼란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노사정 협의는 지난 3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해 초에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되자 김명환 위원장은 형세를 보며 가만히 기회를 살피다가 이런 우회로를 택했다.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협의 제안은 여당이 대승을 거둔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실무 논의를 거쳐 5월 20일 노사정 본회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6월 29일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김명환 위원장이 잠정합의안을 들고 오자 민주노총 중집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원래 중집은 노사정 협의 추진은 물론이고 양보교섭안 제시까지 만장일치로 지지했었다. 그런 중집의 다수 위원들이 보기에도 잠정합의안은 너무 형편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중집은 잠정합의안 추인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애초에 합의 문안이 나오면 중집에서 승인받으려던 김명환 위원장은 입장을 바꿔, 임시대



계급협력은 노동자 조건 지키기에 해롭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 측의 협조·양보 강조한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폐기돼야 한다

의원대회를 소집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중집 위원 다수는 잠정합의안 폐기와 임시대대 소집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여기에 부위원장 8명 중 6명, 9개 가맹노조 위원장, 16개 지역본부장 전원이 동참했다. 또,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비롯해 가맹/

산하 조직의 각급 단위에서 잇달아 잠정합의안반대 성명이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김명환 위원장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임시대대 소집 강행 의사를 재천명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잠정합의안의 내용도 별문제 없고, 임시대대 소집 절차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취지대로 합의안이 마련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한다. “민주노총이 제기한 코로나 위기 극복 프레임과 3대 핵심 의제 중심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었고 그런 방향으로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노사정 교섭이 민주노총의 기대대로 진행됐고 합의안도 그렇게 작성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김명환 위원장 자신이 6월 하순에 했던 주장과 정반대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열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다”고 했다.

그 뒤 사용자와 정부 측이 한 발 물러선 것도 아니므로 민주노총의 핵심 요

구는 잠정합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가령 민주노총이 핵심 중 핵심 요구로 내놓은 “재난 시기 해고금지”를 살펴보자. 이 요구는 기업 지원 시 해고 금지를 의무화하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번 교섭의 책임자 중 한 명인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지난 4월 13일 <한겨레>에 칼럼을 실어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대화]가 성공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이번 대화의 목표는 “해고금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은 재난 시기 해고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40조 원이나 되는 돈을 기업에

퍼주면서도 이런 의무는 기업주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 측은 “재난 시기 해고금지”라는 노사정 협의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번 노사정 대화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스스로 제시했던 잣대에 따라 정직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다른 핵심 요구들은 전국민고용보험제와 상병수당이다. 김명환 위원장 측은 이 요구들도 얻어 내지 못했다. 이 쟁점에 관해 잠정합의안은 하나마나 한 언급에 그치면서 오히려 후퇴를 열어 두기까지 했다.

자본의 개악 요구 저지했다? 계속되는 노동개악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자본의 개악 요구를 분명하게 저지했다”고 주장한다.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 확대 등을 “최종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이것은 성과이기는커녕 오히려 노사정 협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 줄 뿐이다. 노동자 측 교섭자가 애를 써서 어떤 문구를 합의문에서

뺐다 해도 정부는 꾀념치 않고 그것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 벌써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6일 민주당이 탄력근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제출한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이 탄력근로 확대를 합의문에서 뺐다고 자랑했지만, 여당은 잠정합의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잠

정합의안을 장밋빛으로 색칠해 홍보하는 것은 문제인 정부가 지금 이 순간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을 은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김명환 지도부는 여당의 탄력근로 확대 법안 발의를 비판 없이 넘겼다. 이를 뒤 문제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다수를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김명환 지도부는 이것도 비판하지 않았다.

잠정합의안이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잠정합의안의 미흡함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중물로 생각하고 앞으로 채워나아가자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잠정합의의 세부 항목들보다 노사정 대표자들의 합의라는 정치적 상징, 즉 노동자 측이 사용자와 정부 측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상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잠정합의안은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 측이 사용자 측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힘만으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노사정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노동계는 …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침체기에 노동자 측이 사용자와 정부 측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결국 조건 악화를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김명환 위원장이 “임금과 고용을 교환하는 기존 사회적 대화 방식을 전면 철회시켰다”고 자랑하는 것은 부정직한 것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명시된 “근로시간 단축(조업단축)과 휴업 조치에 대한 협력”은 임금 삭감을 뜻한다. 휴업수당 감액도 마찬가지 효과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 사용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조업단축)을 통한 임금 삭감으로 이윤을 지키고자 애썼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이를 합의해 줬다. 이것이 이른바 임금과 고용 맞바꾸기였는데, 바로 이런 방

향이 이번 민주노총 잠정합의안에도 담긴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과 그 측근들은 2008년 이후 이런 합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폭로하지는 못할망정 조합원들에게 진실을 감추려 해선 안 된다.

노사정 실무 협의 과정에 관한 보고를 보면, 정부는 “합의 안 되는 것은 일단 이것 저것 다 빼고 합의 되는 것만으로도 합의문을 만들자”는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든 노사정 합의를 한 다음에 이면에서 개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산일 것이고, 경제 위기 시기에 노사정이 협력하기로 했음을 부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도 노사정 합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대립적 노사관계”를 벗어나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치적 상징을 함께 만들며 계급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사실상의 항복 문서다. 그래서 상층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 양보가 명시되는 것보다 더 우려해야 할 점은 기층 차원으로 양보 또는 양보 분 위기나 압력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층에서 그렇게 노사정 협력이 강조된다면 기층 사업장 차원까지 생산성 제고나, (고용 위한다며) 임금 양보 같은 것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사정 합의 자체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의 임시대대 소집 정당화

김명환 위원장이 중집을 거슬러 임시대대 소집 의사를 밝히자, 중집 위원 다수가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와 임시대대 소집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의원 연서명도 추진했다. 여기에 전국회의와 중앙파와 좌파도 동참했다.

그러자 김명환 위원장은 반대파에 이렇게 반박했다: 임시대대에서 잠정합의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은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 “조식운영상이나 규약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6월 일부 좌파단체들이 선제적 양보안을 반대하면서 임시대대 소집을 요구했던 것을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것에 동의하면 김명환 위원장의 임시대대 소집에 효과적으로 반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내용이 형식에 앞선다. 절차 규정과 형식적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임시대의원대회를 무슨 목적으로 소집하느냐는 문제가

그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이 임시대대를 소집하는 것은 중집 회의를 나흘간 매일 열었는데도 잠정합의안을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존중해서가 아니다.

김 위원장 측의 관심은 오로지 잠정합의안을 승인받는 것이다. 합의안 추진 시도 과정에서 저지른 파행으로 지탄받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이 규약과 형식적 민주주의를 내세워 임시대대 소집을 정당화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민주노총 대의원과 활동가들은 이를 직시하고, 김 위원장의 조직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임시대대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될 뿐 아니라, 김명환 위원장 측은 토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토론을 보장하겠다고 이틀 동안 온라인 게시판 이용 방안을 내놔는데, 이것은 면파용일 뿐이지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없다. 얼마 전 전교조는 온라인 대의원대회에서 찬반 토론을 촬영해 실시간 방영했는데 김명환 위원장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투쟁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2019년 10월 31일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자제 민주노총 결의대회

반대와 중집 위원들의 임시대대 수용

김명환 위원장은 투쟁의 ‘프레임’을 중집보다 상위 기관에서의 결정으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중집 내 반대파는 임시대대 반대로 맞서 왔다. 그러다가 분명한 근거도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참여 후 반대 투표’ 입장으로 7월 13일 선회했다.

같은 지도층으로서 조직의 규약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인 듯하지만, 이런 행보는 김명환 위원장 측에 특이한 권한이 막강해져야 함을 뜻한다.

이런 점에 비해 보면, 만약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승인되면 그것은 민주노총의 적잖은 변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대화와 교섭에 점점 의존하고, 그것을 전담할 전문성 있는 상근간부층의 권한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말이다. 물론 이것은 노동조합이 온건화하는 과정과 이란 대로는 아니겠지만 말이다. 사실 그 동안 김명환 위원장과 그 측근들은 민주노총을 이렇게 바꿀까야 한다는 논전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이번 잠정합의안이 노동자 조직 건지기에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관료주의가 강화된다는 점에서도 그것을 폐기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려고 잠정합의안 추진에 열을 올리는 것은 사용자와 정부 측에 대정부 교섭을 마련은 앞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고, 가맹 산하 조직의 노정 협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김명환 위원장이 잠정합의안 승인에 열을 올리는 것은 사용자와 정부 측에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기 조직도 통제하지 못하는 교섭 상대를 믿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화를 할 사용자와 정부는 없

부 대의원들을 계속 확대해, 정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 기세를 보여 줘야 한다.

지금까지 대의원 3분의 1의 서명을 받았고 앞으로 여드레 동안 기존 기구나 조직 체lebnan 의존하지 않고 미서명 대의원들을 직접 연락해서 설득하며 조직한다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임시대대까지 꽤 남았는데도 지레 임시대대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잠정합의안 반대 운동의 힘을 빼는 효과를 낸다.

물론 불참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반대파 단절 사람의 수를 줄이는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임시대대에 참석해야 하거나,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의원이 있다면 그는 잠정합의안에 반대표를 찍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타협을 하면 우리 측 전열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도부의 투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전술이나 요구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두고 사회주의적 전술의 용어로 ‘타협’이라고 한다.)

지금 타협은 불가피하지 않다. 임시대대 성사와 잠정합의안 지지를 주장하는 대의원들과 보통 조합원들의 기세는 전혀 강력하지 않고 오히려 군색하다. 그래서 임시대대 불참 주장을 불가피하게 철회토록 만드는 압력을 전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참 호소를 접는다면 그건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인 것이다.

지금은 노사정 합의와 잠정합의안의 실효를 폭로함과 동시에 김명환 위원장의 임시대대 소집 논리를 해체시켜야 할 때이다. 두 가지 주장을 결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후자의 주장을 포기한다면 너무 일찍 효과적 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실, 임시대대를 손쉽게 받아들인 반대파 중집 위원들은 노동조합 기구의 결속과 통일성을 지키려고 관료주의적이고 쓸쓸한 태도로 조합원들의 투쟁성과 사기 진작의 필요성을 비웃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천 책

[편집자] 이 기사의 독자는 필자의 다음 책에도 관심을 가질 것 같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좌절과 재시도
(김하영, 책갈피, 2020)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교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김하영, 책갈피, 2017)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김하영, 노동자연대, 2019)

반대와 중집 위원들의 정치적 모호함과, 그와는 다른 대안

반대와 중집 위원들의 입장은 필자가 방금 지적한 점이 분명하지 않다. 잠정합의안을 폐기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대화와 투쟁에 관한 입장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중집 위원들은 7월 13일 발표한 입장 해설 자료에서 이렇게 토로한다: 사회적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합의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노정/노사정 관계에서 배제될 우려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반대파 중집 위원들은 “조직력·투쟁력을 확보해 정부를 노정교섭(협외)에 끌어내야 한다”는 투쟁적 결론으로 맺긴 했다. 그럼에도 반대파 위원들의 또 다른 입장설명서는 이런 고민도 표현하고 있다. ‘합의문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어도 문제, 부결되

어도 문제[다.]” “부결되더라도 힘있는 투쟁을 할 수 있는 내부 태세가 안 돼 있다.”

사실상 이 말은 부결되도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 그래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기 딱 좋을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볼 만의 초점을 제공하고 투지를 불러일으켜야 할 텐데 말이다. 게다가 김명환 위원장 측이 이용하기도 딱 좋을 것이 있다.’

따라서 중집 위원들의 잠정합의안 반대를 지지하면서도, 노동자 조건을 지키기 위해 대중 투쟁, 특히 파업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되거나 잠정합의안이 부결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용자들의 공격과

정부의 배신 행정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의 세력균형을 고려하면 노조·연맹 위원장들 자신이 파업을 소명해야 한다. 현장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비공인 파업에 나설 자신감 수준은 아닌 것이다. 그래도 노조의 공식 파업 소명이 있으면 거기에는 기꺼이 응할 것이다. 중집 위원 다수가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하는 데 현신하겠다”고 한 만큼 그 말대로 실행해야 한다.

잠정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중집 위원 가운데는 민주노총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투쟁 역량도 있는 노조의 위원장들이 포함돼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가 대표적이다. 이런 노조들이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고용 보장, 고용보원 특고 적용’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호출(명령)하는 것은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다.

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

김명환 위원장 측을 지지하는 매우 온건한 전직 민주노총 상근간부는 “필도 끝도 없이 투쟁만 주장”하는 좌파를 비판했다.

그러나 필자가 앞에서 강조했듯이 경제 위기와 침체기에는 노동자 조건을 지키려는 어떤 중요한 요구도 결코 투쟁 없이 성취할 수 없다. 투쟁은 지금 상황과 관계없이 공허하게 제기된 실적 대안이다. 그러므로 투쟁을 호소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력한 무용지물 단체나 개인들의 편리한 도피 수단인 아니다.

물론 세력관계도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주문 외우듯이 “투쟁!” 하고 외치면 투쟁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해선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반대파 중집 위원들이 투쟁을 소명하도록 압박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와 사기 회복을 추구하려 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처럼 온건파 인사들은 현장 동력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일지 몰라도 그것은 주로 계급협력과 타협, 양보에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의지해 온 김명환 위원장 등

온건파 노조 지도자들의 방침과 지향에 낳은 효과이다. 투쟁 동력 부재를

들먹이는 사람들은 평소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다. 정규직이 자기 조건 지키려고 투쟁해선 안 된다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하나의 계급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거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 투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노동계급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단결하기가 어려워졌다 등등의 주장을 하면서 말이다.

진정한 좌파라면 이런 주장에 맞서 계급을 단결시킬 수 있는 정치를 제시해야 한다.

김명환 위원장 사퇴론과 진정한 혁명적 노선

일부 좌파단체들은 김명환 위원장 사퇴 또는 집행부 총사퇴를 주장한다. 잠정합의안의 내용과 추진 시도 과정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보인 행태에 대한 이들의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단지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김명환 위원장을 실재로 사퇴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김명환 위원장이 임시대대를 소집한 현 국면에서 위원장 사퇴는 오직 잠정합의안 승인을 좌절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전에 위원장 사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공허한 요구이기 십상인 데다,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 무엇인지에 답하지 않는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 임시대대 소집 거부를 분명하게 하

지 않으면서(그 주된 이유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논리를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퇴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김명환 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전선에 힘을 집중시키기를 흐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김명환 위원장 사퇴(또는 집행부 총재로 사퇴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김명환 위원장이 임시대대를 소집한 현 국면에서 위원장 사퇴는 오직 잠정합의안 승인을 좌절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전에 위원장 사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제계·사회적 위기에 내건진전 노동계급의 조건을 지키려면 잠정합의안을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잠정합의안의 형편없는 내용을 폐기하는 것뿐 아니라, 대화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 온 기존 방침에 대한 180도 전환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현 사태의 대안을 지도부 교체에서 찾으려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준비에도 방향을 맞추면, 실질적인 저항의 초점을 형성하는 데 추가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공약이 주된 방식이 되면서 기회주의적 이해타산과 이합집산이 득세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집행권 장악을 앞세우기보다 기존의 투쟁성과 활력 회복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는 이윤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혁명적 정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 정치로 무장한 혁명적 좌파가 기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여부가 미래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사정 잠정합의안 반대 운동을 하는 동시에, 기존에서 혁명적 정치와 조직을 구축하는 과제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이 글은 지난 7월 14일 같은 제목의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필자가 한 발제에 기초했다. 당시 영상은 유튜브 ‘노동자연대TV’에서 볼 수 있다.

미국 인종차별 반대 투쟁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더 커지다

김준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강경 행보로 중첩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트럼프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우리는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선동가, 약탈자를 격퇴하는 중”이라며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미국의 [인종차별적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조각상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0일 트럼프는 플로리다주(州)에 있는 미군 남부사령부를 방문하여 “경찰 재정을 절대 감축하지 않을 것”이고 “[이주민에게] 국경을 개방하지도, 경찰을 해체하지도, 국방 예산을 감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강경하게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같은 날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중 하나로 지목돼 징역을 선고받은 로저 스톤을 복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감형·석방했다. 이에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도 “전대미문의 부패 행위”라며 반발했다.

트럼프의 강경 행보에 고무된 인종차별적 극우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와 충돌했다. 7월 4일 백악관 앞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미국은 위대했던 적이 없다”고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맞받아쳐) 외치고, 일리노이주 볼티모어에서는 시위대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을 끌어내려 항만에 던져 버렸다. 그런데 두 곳 모두에서 무장한 극우가 시위대를 공격해 부상자가 생겼다. 같은 날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는 19일째 도로를 점거하던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극우 한 명이 차량을 돌진시켜 시위대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그러나 사태는 트럼프의 뜻대로 되지는 않고 있다.

대선이 네 달 앞으로 다가온 현재 트럼프 지지 여론은 역대 최하로 떨어졌다. 트럼프 지지율은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에 두 자릿수 차로 뒤지고 있다. 7월 10일 <US 뉴스>는 “미국인 3분의 2가 미국의 중대한 위기들에 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거리와 작업장에서 확대·심화해 트럼프에 맞서야 한다. 6월 27일 오키오주(州)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에 참가한 사회복지 노동자들

한 트럼프의 대처에 반감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10일 남부사령부 방문은 공화당 전당대회 개최 예정지인 플로리다주 표심을 단속하려던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7만 명을 넘었고, 다음 날인 11일 플로리다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미국 주(州) 중 최대인 1만 5299명을 기록했다.

이미 의료 시설의 수용 한계가 한참 초과된 마당에, 예전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북부 대도시뿐 아니라 남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졌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일일 평균 사망자 수가 그 전에 견줘 50퍼센트 이상 증가해, 시신을 냉동트럭에 보관하는 실정이다.

들끓는 여론 때문에 7월 11일 트럼프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9월 학기부터는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서 빈축을 샀다.

코로나 위기에 악화되는 경제 위기도 지지를 하락의 큰 요인이다. 외신들

에 따르면, 3월 이후 미국의 실업 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번 경제 위기가 터진 2008년의 최소 세 배에 이른다.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매주 평균 600달러(한화로 약 72만 원)인 연방정부 실업 급여가 7월 말에 종료되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표가 많이 나온 백인 저소득층에서 지지를 하락폭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중첩된 위기

이처럼 미국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한 중첩된 위기가 여전히 미국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증폭된 인종차별과 경제 침체 때문에 사상 최대의 다(多)인종 항쟁으로 번져 미국 정치 지형을 뒤흔들었다.

이 운동은 의미 있는 몇몇 성과들을 이끌어 내면서 다음 단계를 모색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329호 ‘미국을 뒤흔든 인종차별 반대 운동 앞에 놓인 것’)

온건 시민단체들과 민주당 친화적 인사들은 이 운동이 이제 트럼프를 선거에서 심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워낙에 사악한지라 적잖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떨어뜨리려고 민주당 권력층 후보 바이든에 투표하려는 듯하다.

바이든은 광범한 반(反)트럼프 정서에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이 좋아서 그를 찍는 게 아닐 것이다. 바이든은 철저한 기득권 후보, 즉 지금의 위기를 낳은 바로 그 정치를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의 긴축 공격에 실망해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거부한 ‘러스트 벨트’(오대호 인근 쇠락한 제조업 지역)에서 바이든은 트럼프를 크게 앞지르지 못했다.

바이든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요구를 한사코 받아안지 않으려 한다. 7월 8일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의 ‘통합 태스크포스팀’이 발표한 정책 권고사항에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핵심 요구 중 하나였던 경찰 재정 삭감이 아예 빠졌다. 오히려 “지역사회 경찰 활동 활성화”를 내세운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그동안 지역사회 수준에서 경찰 무장력을 강화하고 거리에서 (주로 유색인종의) 위법 행위를 단

속할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경찰에 부여할 때 사용된 글귀였다.

바이든과 샌더스는 “법집행기관 감시” 항목에서 경찰 업무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전국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등의 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트럼프가 6월 17일에 발표한 경찰 ‘개혁’ 행정명령과 표현까지 똑같은 것들이다. 당시 이 안을 두고 <워싱턴 포스트>조차 “경찰 개혁에 잠깐 신경 쓰는 척할 뿐인 안”이라고 논평했다.

그 밖에도 이 정책 권고사항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일례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관해서는 침묵한다. 물론, 권고사항에는 연방 최저 임금 15달러로 인상 등 운동의 몇몇 오랜 요구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바이든과 민주당 실세들이 그런 ‘진보적’ 권고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겠는가.

샌더스가 “경찰 재정 삭감”을 공공연히 반대하며 바이든 선거 운동에 매달리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오랫동안 설왕설래만 거듭하다 미뤄지고 현실성이 없다며 단칼에 무시됐던 요구들”이 거대한 대중 운동에 의해 달성되고 있는 현재 미국의 상황은 대중의 자주적인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샌더스가 모범으로 삼는다면 유진 웹스(1855~1926)도 민주당을 공화당과 다를 바 없는 자본가 계급 정당이라 보고 — 그는 두 당을 두고 ““민주공화당”이라는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 했다 — 노동 대중의 자주적인 투쟁을 옹호하지 않았던가.

한편, 이에 대한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침묵도 아쉽다. DSA는 자당 ‘스타’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당의 결정을 위배하고 바이든 캠프의 정책팀에 참여한 데에도 침묵했다. DSA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참가에는 굵은 반면 민주당 예비경선에는 열성적으로 임했는데, 이는 그 당의 개혁주의적 문제점을 보여 준다.(관련 기사 본지 322호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④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민주적 사회주의’)

노동조합들이 인종차별 반대 파업을 준비하다

그러나 운동이 단순히 투표로만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다.

흑인 차별뿐 아니라 다른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도 더 자라날 조짐이 있다. 6월 18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이주 아동 추방 유예 행정명령(DACA)’ 폐지 시도를 위헌으로 판결한 데 고무돼, 트럼프 정부의 이주민 차별 핵심 기구인 이민세관단속국 자체를 폐지하자는 요구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반자본주의 단체 ‘마

르크스21’ 활동가 빅터 페르난데즈는 “대중 운동이 모든 이주민을 합법화하고, 인종차별적 이민법과 [이민세관단속국 같은] 그 집행 기구들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무적이게도 노동자 파업 소식들도 들리고 있다. 6월 19일 국제항만노동조(ILWU) 서부 지역 노동자들이 인종차별 반대를 걸고 하루 파업을 벌여 항구 29곳을 하루 동안 마비시켰다.

7월 20일에는 북미서비스노동조(SEIU)와 농장노동자노동조(UFW) 등

이 주도해 전국 25여 개 도시에서 하루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관련 기사 본지 330호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준비되다’). 이 노동자들은 인종차별에 반대할 뿐 아니라 작업장 방역·안전 보장, 유급 병가 보장, 시급 인상, 의료 보험 사측 부담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은 요양 노동자들과 대농장 노동자들이 이날 파업에 많이 동참할 전망이다. 요양 노동자들은, 한 통계에 따르면 87퍼센트가 여성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유색인종이며 대유행 이전부터 낮은 임금과 위험한 노동 환경에 시달려 왔다. 상당수가 중남미계 미등록 이주민들인 대농장 노동자들도 열악한 처지에 시달려 왔다.

한편, 7월 14일 현재 메인주(州) 배스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조선소에서는 기계항공노동조(IAMAW) 조합원 4300명이 6월 22일부터 3주째 파업 중이고, 일리노이주 졸리엣의 세인트조셉종합병원 보건의료 노동자 700명이 임금 인상과 방역·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10일째 파업 중이다.

미국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일부터 수백 건의 비공인 파업을 벌여 왔는데, 이런 투쟁들도 그 연장선에 있다.

현 국면을 돌파하려고 트럼프가 인종차별을 더한층 부추기는 지금, 대중투쟁이 거리에서, 그리고 작업장으로 더욱 심화·확대돼야 한다. 혁명적 좌파는 이런 투쟁들에 흠뻑 지지를 보내고 운동의 심화·확대에 기여하면서, 새롭게 급진화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유병규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7월 13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5월 11일 해고된 이후 두 달여 동안 투쟁해 온 노동자들이 성과를 낸 것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고용유지지원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간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일해 왔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렇게 노동자들을 쥐어짜 부를 쌓았는데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자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이나, 무기한 무급휴직이냐 하는 선택을 강요했다.

사측의 강요로 노동자 500여 명 중 120여 명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360여 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한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다. 무기한 무급휴직 동의서 서명을 거부한 노동자 8명은 정리해고를 당했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 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은 해고 못지 않은 커다란 고통을 준다. 노동자들이 무기한 무급휴직 강요를 거부한 것은 정당했다.



6월 29일 금호아시아나 빌딩 앞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 정부는 세 차례나 찬막을 강제 철거했지만 노동자들은 두 달 넘게 농성을 유지했다

무급휴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5월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마저도 기한이 3개월이어서 8월부터 끊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사측은 무급휴직자 중 160명을 ‘선별’해 업무에 복귀시켰는데, 최근 항공기 운항이 늘어나면서 연

장 근로까지 하고 있다.

사측의 이윤 논리 때문에 무급휴직으로 생계난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는 반면 일부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아시아나케이오와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무기한 무급휴직에 반대하며 두 달여 동안 농성 투쟁을 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농성 찬막을 세 차례나 강제 철거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된 것도 서러운데, 코로나19를 핑계로 집회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반면,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한 항공업체 기업주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악질 자본을 비호하려고 이제 갈 데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평짜리 농성 찬막을 걷기 위해 종로 일대에 집회 금지를 내놓은 것이 이 나라 정부입니다.”(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정남 지부장, 7월 9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주최 기자회견 중)

이런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이 얻어낸 부당해고 판정은 값진 성과이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노동자 5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측은 승복하지 않고 우리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쟁, 2차전을 치를 준비를 하려 합니다.”(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정남 지부장)

사측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공산이 크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 받았지만, 아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 노조들이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면서, 항공업을 비롯해 서비스업, 제조업 등 곳곳에서 확대되는 구조조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신정환

집배노조가 7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과 ‘겸배’(자신의 배달구역 외에 동료가 빠진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 제도 폐지, 부족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상경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배원 등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집배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지난 10년(2010~2019년) 간 집배노동자 184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이 시스템을 ‘살인 업무 강도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우정본부가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더 높이려 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 시스템은 우편물 배달 과정의 각 업무별 ‘표준시간’을 초 단위로 만들어 집배노동자의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간과 인력을 산출한다. 편지 한 통 배송에 2.1초, 등기 한 통에 28초, 택배 한 통에 30.7초로 집배원의 노동을 기계처럼 계량화하고 옥점다.



‘과로 지옥’ 우체국에 노동 강도 강화가 웬 말인가 7월 8일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노동자들은 지킬 수 없는 “초 단위로 집배원들의 업무량 자체를 측정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수년간 이 시스템의 폐지를 촉구해 왔다. 2018년 감사원 감사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권고안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이 시스템을 집배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인력 충원을 회피하는 근거로 계속 사용해 왔다. 최근 이 시스템에 따라 “여유

인력”이 발생한다며 인력 재배치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집배노조가 인력 재배치 철회와 해당 시스템의 폐기를 요구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관련해서 본지 329호 기사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를 참고하십시오.)

지난 7월 7일 우정본부는 이 시스템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우정노조(한국노총 소속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했

다. 새 대안을 마련하면 기존 시스템은 폐지된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존 시스템을 고쳐 쓸 것이 아니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이 더 나이지리란 보장도 없고, 언제 바뀔지도 모릅니다. 현 시스템이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핑계로 필요 인력도 주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즉각 폐지가 정답입니다.”(이상철 집배노조 시흥우체국 전 지부장)

이미 우정본부는 2018년 말에 현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을 ‘개선’하여 내놓았지만, “현장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다.”

계속되는 중노동

퇴직과 병가 등 부족 인원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우정본부는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겸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럼에도 우정본부는 부족 인원 충원 계획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우정본부가 집배노조와 면담하면서 올해 추진하려던 인력 재배치는 철회하겠다고 말했지만, 인원 충원을 미적대는 것은 집배 인력 구조조정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속셈이다.

우정본부는 지난해 비용 절감을 이유

로 약속한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 계획을 파기했다. 대신 특수고용 노동자인 위탁택배원 등 비정규직으로 일부 대체해 왔다. 우정본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을 늘려왔는데, 2025년까지 위탁택배원이 담당하는 구역은 45.3퍼센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2016년 ‘우정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올해는 소형우체국 폐국, 정규직 업무 아웃소싱 등 우체국 통폐합과 조직 인력 운영 효율화를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다. 정규 인력 규모를 축소해 나가려는 것이다. 우정본부가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폐지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정규 인력 구조조정과 우체국 통폐합 등은 우편공공성 약화와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로 이어진다. 올해 상반기에 소형 우체국 폐국이 추진되자,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우체국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지역 주민들의 우편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커졌다. 우체국 통폐합으로 노동자들은 전환배치되거나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우정본부의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고 우편 서비스 악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제대로 대비 안 하면 두 번은 못 막는다” 의료연대본부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가 7월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19 팬데믹, 자본주의의 냉혹함 보여 줘

“해고 금지 등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싸워야”

코로나19 발생이 중국에서 보고된 지 200일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이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미국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었죠. 세계에서 가장 환자가 많고요. 그 뒤를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환자가 생겼던 중국은 매우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제로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과를 낸 듯합니다.

반면, 미국은 확실히 통제 불능, 아니 통제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 그래프를 보면 두 개의 봉우리를 그리고 있는데요, 2차 확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아직은 1차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부에서 확산했고 이제는 서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뉴욕 등 동부 주요 도시들은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증가세가 둔화됐어요. 반면,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1만 명을 넘긴 7월 11일에 디즈니랜드를 개방했죠.

에당조 코로나 종식,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하나는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다 걸리자는 거였는데요, 스웨덴이 후자 방식을 추진했는데 인구가 1000만 명인 나라에서 사망자가 5500여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태 인구의 7퍼센트에게만 항체가 생겼고, 그것도 몇 개월밖에 안 간다는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실패한 거죠. 그런데도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중요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확실히 줄어들기 전에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며 외출금지령 등을 해제하고 상점 문을 열었어요. 유럽 내 여행도 허용했고요. 그 결과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확진자 규모가 하루에 수백~수천 명 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진국들의 상황인데요. 사실상 방역을 거의 포기한 듯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가들의 논리를 따른 결과입니다.

제3세계 나라들에서는 격렬한 확산

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와 인도, 아프리카 등인데요. 사실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이런 곳들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해 급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동아시아에서는 일부 나라들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일본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 상황은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나머지 나라들도 줄타기하거나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정부들이 코로나 대응에 이토록 무능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선진국 정부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봐요. 처음에는 꽤나 우려도 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의 피해 양상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중요한 건 노인들이 주된 피해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각국 지배자들은 노인을 재정이나 축내는 존재로 여기죠. 또, 백신이 빨리 나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불가피한 희생은 감수하겠다는, 즉

비생산적 인구인 노인이나 단순[비숙련] 노동자들의 사망·질병 등은 무시하겠다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코로나와 함께 살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일반인 대상 무작위 조사를 종합해 본 결과, 무증상 감염이 확진자의 1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조사에서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0.6퍼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독감 치명률의 6~1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노인 인구의 경우 치명률이 5.1퍼센트나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 정부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 주는 대목이죠. 결국 코로나를 극복하는 두 길 중 아만적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나라 정부들은 어느 정도만 통제되면 이대로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망자가 13만 명이 넘었고 브라질에서는 7만 명이 죽었다는데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상황을 보며 어느 정도 자신감도 회복한 듯합니다.

이건 저항이 아직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기도 하는 거라고 봐요. 한편에서는 경제 위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감염병을 단순히 자연재해로 여기는 생각도 영향을 끼치는 거겠죠. 그러니 ‘위험해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위

축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다.

한국 상황은 줄타기나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고 하셨는데요.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다행히 대부분 그 위기를 넘겨 왔습니다. 방역 측면에서만 보자면 지자체별 대응 능력도 초기에 비해 나아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상은 좀 더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지역 감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수도권에서 대전, 광주로 확산되고 있죠. 다음으로, 환자 중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1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추적과 격리 등 방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환자 치료 능력이 극도로 낮습니다.

코로나19 환자 100명 중에 20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중에 5명은 중환자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공공병상이 거의 꽉 찼다고 해요. 대전과 광주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겼고요. 그래서 중앙임상위원회가 퇴원 규정을 완화하자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퇴원 규정을 완화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조치로 한숨 돌렸지만 확진자 증가 추이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지금의 의료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위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대구의 경우 환자가 6000명이었을 때 2300명이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23명은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었죠. 전국적으로 환자가 매일 100명만 되도 순식간에 중환자실이 포화될 겁니다.

한국의 경우 인구의 0.2퍼센트만 한 시기에 집중 감염돼도 10만 명이 걸리는 셈인데요. 0.5퍼센트면 25만 명이 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러면 중환자실만 1000~3000개가 더 필요합니다. 공공병원에 지금 당장 감염 병상을 만들면 200개는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전국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30퍼센트를 징발하면 1000개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은 95퍼센트 이상 환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지금 중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부는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봐도 공공병원 중환자실을 늘릴 생각을 안하고 있고요. 아예 중환자실 준비는 안하는 듯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정부가 아무런 준비를 안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유사시에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수술 후 중환자실(SICU)’을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해요. 불필요한 수술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수술 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판까지 물리면 암 환자 등도 비응급수술로 분류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중환자실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럽이나 뉴욕에서처럼 노인 환자들은 병원에서 살리기를 아예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참사도 이처럼 공공병상과 의료진 부족에서 비롯한 측면이 큼니다. 롬바르디아가 속한 이탈리아 북부는 북부동맹이라는 극우파 지방정부의 집권이 계속된 곳이고 우파의 영향력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2008년 유로존 위기 이후 복지재정이 30퍼센트나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이민을 가고 간호·돌봄노동자도 부족한 상태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감염이 확산되자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한 겁니다.

신종 감염병이 의료 체계에 주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주는 부담이 엄청 크죠.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진이 탈진해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있던 감염병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베트남 지역에서는 디프테리아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예방 접종을 못 해서 일어난 일이지요. 위생 문제 등이 연관돼 페스트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죠. 에볼라 같은 다른 신종 전염병도 세계 곳곳에서 번지

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2년 안에 안 끝날 거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계절성 감염병처럼 주기적으로 유행하거나 아예 풍토병처럼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죠.

기후 위기가 계속 심화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면 새로운 질병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2018년 2월에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고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질병 리스트 8가지를 발표했어요. 그중 마지막이 ‘질병 X’였는데 미지의 질병이라는 얘기죠. 코로나19가 바로 그 병원체인 겁니다.

사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인데 코로나19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이에요. 거칠게 말하면 사스의 약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진화를 한 거예요. 인간 숙주에 잘 감염되고, 세대 주기가 빨라지고, 무증상 감염을 일으키는 등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진화가 계속 진행돼서 코로나26, 코로나29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 항체가 몇 개월 안 가기 때문에 3개월마다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요.

게다가 WHO가 거론한 나머지 7개(질병 수로 따지면 9개의) 질병 리스트도 여전히 미해결 대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상황은 어떤가요?

가장 앞서 있는 모더나의 백신도 아직은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여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백신인데 아직까지 이 방식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최근 임상 1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왔지만 중화항체가 만들어졌다는 정도고요. 그게 실제로 방어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어요. 백신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도 미지수고요.

안전성 문제도 검증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시험대상이 45명으로 작은 규모인데다 건강한 18세~55세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나 기저질환자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알 수 없고요. 백신 안전성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 유발 호흡기 질병 악화’라는 최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커 보여요.

설사 성공했다고 발표해도 그 효용이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에이즈/HIV 바이러스 등과 같은 알엔에이(RNA) 바이러스인데요. 알엔에이 바이러스의 경우 변이가 워낙 심해서 백신 개발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율이 40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해에 유행할 인플루엔자 종류를 맞히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맞혀도 조그만 변이들 때



아프면 쉬라고? 실질적 생활비를 보장하지 않으면 '아프면 쉬라'는 지침은 무용지물이다. 사진은 7월 7일 출근하러 물류센터(부천) 앞에 긴 줄을 선 쿠팡 노동자들의 모습

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이 개발된 지 70년 정도 됐는데도 이 정도고 에이즈/HIV 백신은 아직도 미개발 상태이니까 어쩔지 대략 예상이 되죠. 최소한 1년 반은 지나야 모더나 다음에 개발에 착수한 백신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백신 효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고요. 그 뒤에 생산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이고 말하자면 ‘천운이 따라야’ 내년 하반기나 돼야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은 길리어드 사이언스 사(社)가 만든 렘데시비르가 지금까지 유일한데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는 정도입니다. 중환자 사망률을 몇 퍼센트 낮추고 입원 기간을 며칠 단축시킨다는 건데요. 모두 길리어드 사의 발표라 실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한국에는 첫 한 달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 임상 시험의 일부라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굉장히 촉박하게 임상 시험을 마쳐서 흔히 임상 4상으로 알려져 있는 시판 후 시험단계(PMS)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굉장히 비싸고 주사제로 개발돼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사용하지도 못해요. 길리어드 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민간보험 가입자는 3120달러(375만 원), 공공보험가입자는 2340달러(281만 원)가 약값이라고 발표했어요. 약값이 이런데 제3세계에서 어떻게 쓰겠어요.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는 주사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데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제3세계에서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과 예방에 투자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가 뭔가요?

세계 어디에서나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생계가 불안정해지면 어떻게든 살기 위해 여기

저기 돌아다녀야 하고 이는 감염 전파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금지하고,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할 때도 최소한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태세를 보여야 기업이 노동자들을 내팽개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해고 금지 조항을 근거로 노동자들이 저항할 수 있겠죠.

유럽의 경우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정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해야 하겠죠. 그게 조직된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가 코로나 시기 해고 금지였고요. 유급병가·상병수당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 인력과 공공병상·중환자실 확충, 공공병원 등 의료 대응 컨트롤 타워 설립, 감염병 예방 미준수기업 처벌 제도[감염병 예방법 개정 등], 임대료 동결과 국가 대납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이지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결코 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보면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해고 금지 같은 건 아예 없고, 다른 필수적 조치도 약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 지침에 노사정이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던데요. 이게 무슨 소리죠? 노동자들이 예방 지침을 어겨서 문제인가요? 쿠팡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는 사용자들입니다. 기업주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서 사용자들이 지침을 지키도록 해야죠.

합의안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앙·권역별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조직을 마련한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며 지역공공-민간병원의 협력체

계를 구축한다.” 그런데 이전 원래 정부가 공약했던 내용이에요. 왜 자기를 공약을 이제 와서 노사정 합의라고 내놓는 겁니까?

‘아프면 쉬라’는 지침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아플 때 쉬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는 최저생계비도 안 돼요.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광주 의 일용직 노동자 사례를 보세요. ‘1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죽어도 좋다’며 잠적했다가 공사 현장에서 추적·발견됐는데, 치료와 격리 기간이 평균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나마 격리 기간에는 스스로 생활을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정부는 45만 원 주고 버티라고 하니 어떻게 입원 치료나 격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한편, 보통 경력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적응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려면 최소 훈련 기간이 8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을 200개만 추가로 운영하려고 해도 방역복을 입고 2시간마다 교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사와 간호사들을 훈련시켜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구에서 벌어진 일처럼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흔히들 ‘K-방역’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K-의료’는 6000명의 환자 대응에도 실패했습니다.

병원은 물론이고 정부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해요. 지금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는 돌봄노동자 한 명이 평균 여덟 명을 돌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서는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제공할 때에만 제대로 된 요양이 이뤄질 수 있어요. 비용도 대폭 낮춰야겠죠.

사람들이 집이나 자영업 점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정부가 임대료를 동결시키거나 대납하는 조치도 필요하죠. 이러한 것들은 정말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양효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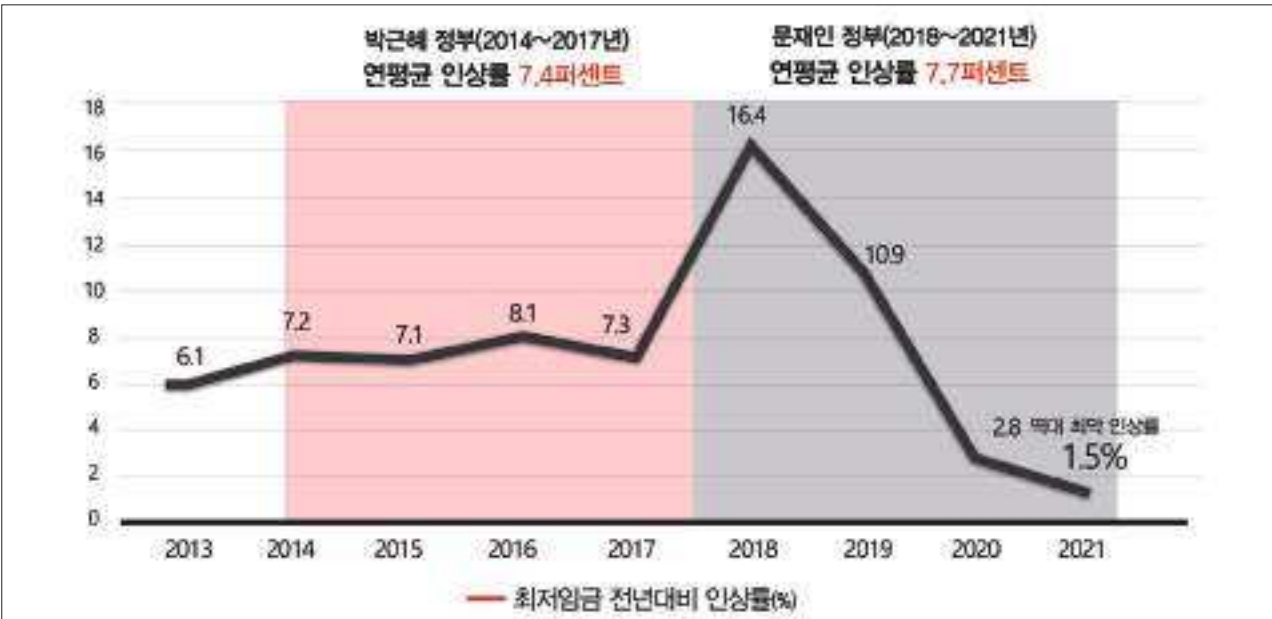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 시급 8590원에서 겨우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퍼센트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겨우 2.9퍼센트 인상돼 역대 최악이었는데, 1년 만에 이를 갱신한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민주노총 1만 원, 한국노총 9430원)과 사용자 측의 삭감안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1.5퍼센트 인상률을 제안하고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표결에 불참했고, 공익위원 조정안이 나온 후 한국노총조차 반발하며 퇴장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상승률을 1.1퍼센트로 예측한 것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 수준 정도만 올린 것으로 사실상 동결이다.

그런데 2024년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상당수는 실질임금이 아예 삭감될 수 있다.

2018년 정부가 상여금·복리수당 등을 최저임금으로 산입하고 그 산



소득주도 성장 운운하더니 사실상 박근혜 정부 기간과 비슷한 연평균 인상률을 기록했다

입 범위를 확대해 온 탓에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억제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으면 산업법위 확대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기 쉽다. 민주노총은 이미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퍼센트)로는 복리수당을 20만 원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3.57퍼센트 삭감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도 나쁜 소식이다.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의 기준인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80퍼센트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80퍼센트가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경기 악화로 노동자들(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처지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진행됐

다. 통계청 보고를 보면, 올해 1분기에 하위 20퍼센트(저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이 특히 감소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소득 감소로 인해 적금 해지, 보험 해약, 대출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박하며 삭감을 부르짖었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사용자들의 편을 들었다.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기업주들에게는 수백조 원을 턱하니 지원해 주면서,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임금은 밑바닥에 묶어 두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도대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어떻게 고려됐다는 것인가?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더니, 그 결과는 최저임금 동결·삭감이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에도 취약계층 지원책은 추상적인 공문구만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안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모호한 문구보다 정부와 사측의 실제 행보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 준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에 매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진지하게 조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정부·사용자들에 협력하는 방식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이익도 결코 방어할 수 없다.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박설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 법안들이 국회에서 곧 다뤄진다.

이 같은 쟁점들은 지난해 내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온 대표적인 노동개악안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며 양보를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개악과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한 절차를 착착 밟아 왔다.

얼마 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도출된 잠정 합의안이 “비대면 진료,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 등 자본의 개악 요구를 분명하게 저지”했다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측의 평가는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다.

가령,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에 힘을 쏟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6월 23일),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할 원격의료 관련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7월 3일). 민주당 의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7월 6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다수를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정부 법안도 입법 예고했다(7월 8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악인 1.5퍼센트(시급 130원 인상)로 결정됐다(7월 14일).

착착 추진돼 온 개악, 노동자 고통 증대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로,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 추진을 멈추거나 후퇴한 적이 결코 없다. 20대 국회에서 개악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된 것은 민주당과 통합당(당시 한국당)이 선거법, 조국 청문회, 공수처법 등을 둘러싸고 정쟁을 계속했기 때문이지, 정부의 개악 의지가 사라져서가 결코 아니다.

이 점은 정부가 개악 입법화 이전에 이미 기업주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 온 데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역제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하기 전에 별도의 구간설정위원회를 뒤서

인상 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악안을 추진했었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그것이 노리는 효과를 톡톡히 뱌다.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익위원들이 역대 최악의 인상률을 고집한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말이다.

그러는 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방치됐다. 올해 한층 더 심각해진 경제 위기 속에서 이들의 삶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일용직·임시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임금 수준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사기였을 뿐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 삭감을 위한 제도 개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노리는 바다.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지난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

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7월 14일에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용 기간도 현행 90일보다 사실상 두 배나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90일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했더라도 하반기에 다시 90일의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이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고통에 신음해 왔다. 정부가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경우는 1665건에 이른다. 2017년 한 해 동안 15건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111배나 늘어난 수치다.

저항을 단속하기

문재인 정부가 노동법 개악에 열을 올리는 것도 사용자들의 고통전가, 노동개악 공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작업장 점거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에 제약을 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를 묶어 두려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박탈 당한 소수 노조의 경우, 더 오랫동안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법 개악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동시 상정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하려했더니 사용자들의 개악 요구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되레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려는 것이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민주당이 ‘슈퍼여당’이 됐으니 우파 야당의 방해 없이 친노동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노동운동 내에도 적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노사정 합의 승인을 추진하는 배경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과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사상 최악이라는 세계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위기 속에 한국 자본주의를 구하고 기업의 이윤을 확고히 보호해 주려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 같은 정부·여당과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필요한 이유이다.